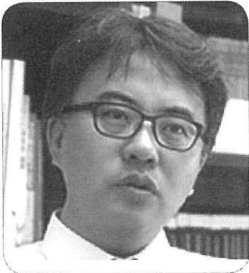




원자력 안전문화와 국민을 위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한양대 신문방송학 학사
- 영 레스터대 언론학 석사
- 영 웨스트민스터대 언론학 박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환경TV 시청자 자문위원
- 방송대상심사위원
- 방송평가위원
- 미디어 칼럼니스트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종사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적 풍토, 이른바 ‘안전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원자력의 특성상 “그것까지도 예상해야 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때부터 원자력의 모든 부분에서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했다.

안전문화, 국민들과의 신뢰 기반 형성되어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주요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해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50개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시설과 비상 설비 및 주민 보호용 방호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였고, 신규 원전의 경우는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 안전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여러 노력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신뢰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동안 원자력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원자력 종사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과 국민들이 알고자 한 내용, 그리고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했다는 것

이다. 예컨대, 원전 수출 실적의 경우 국내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의 치적 홍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원전에서 발생한 소규모 사고나 고장이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수치를 동원하여 진실을 호도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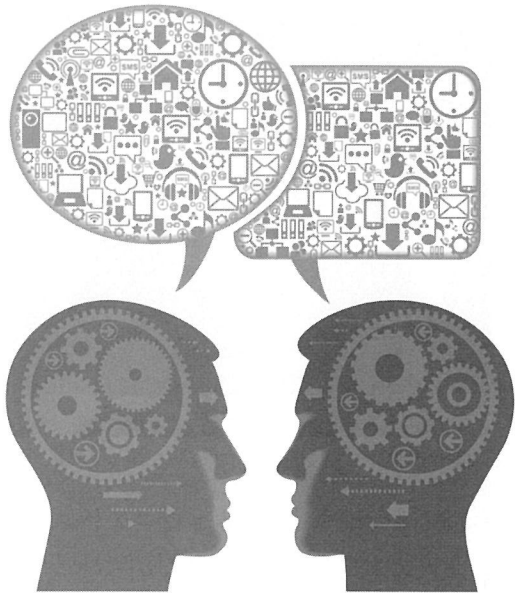
언론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원자력과 관련한 사안은 그 특성상 평상시나 긍정적 활용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원전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거나 원자력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 비로소 주목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원자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한다.

원자력 종사자들의 태도가 언론의 이러한 보도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가능한 한 외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남아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나 수치를 들어 해명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이나 취재 보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다.

언론과 원자력,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규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자력 종사자들과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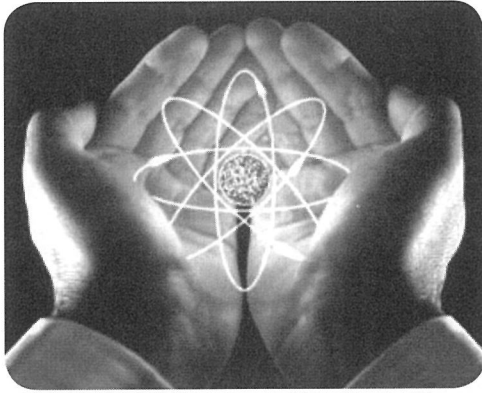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자력 종사자들과 언론 상호간에 지켜야 할 커뮤니케이션 규범이 있다. 무엇보다 양자 모두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준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간에 지켜야 할 커뮤니케이션 규범이 있다. 무엇보다 양자 모두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준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이란 넓게는 '과학적 상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의미하고, 좁게는 'TV, 신문 등의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과학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또는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 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관련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과학커뮤니케이션 공보 준칙을 지켜야 한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 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은 또한 과학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 사실 보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보도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보도 내용은 전문가들의 중복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절대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는 불신의 골이 있는 경우 더욱 필요하다. 사소한 사실이라도 감추려 한다면 불신은 견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이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은 설득의 합리성을 담보해주는 근간이다.

다음으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커뮤니케이션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과학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는 유용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과학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무엇보다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기자가 어떻게 쓸지 무서워 말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상대가 소통하려 한다면 언론도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은 또한 과학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 사실 보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의견은 자유이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과학커뮤니케이션에서 더욱 절실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보도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보도 내용은 전문가들의 중복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언론은 또한 제대로 된 과학 보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갖춘 기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취재 보도 과정에서 과학 보도의 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언론과 원자력 종사자들 모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들과 더불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SNS, 이용과 제대로 된 활용은 다르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새로운 공공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언론 수용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SNS 이용자는 관심 있는 정보의 교환을 매개로 상호 관계를 형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형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SNS의 쌍방향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면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SNS는 서로 관계를



원전 주제어실.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SNS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공공 영역의 이용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활용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원자력 관련 논의는 정책 당국이나 관련 종사자, 언론만이 주도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합리적이며 과학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SNS의 전략적 활용은 필수적이다.

맺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공공기관들에서도 SNS를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SNS를 ‘이용’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몰라 휴면 수준의 단순 이용 상태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유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우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면서 불필요한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기도 했다. SNS의 효과적 활용은 커녕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과 같은 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SNS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SNS의 매체 특성과 이용 환경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SNS를 통한 정보는 매체와 채널에 따라 그 내용과 효과가 다르다. 이용자의 특성이나 사회심리적 성향, SNS 이

용 동기와 이용 행태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쟁점과 관련한 정보의 유통 경로와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도 SNS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공공 영역의 이용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활용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SNS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수평적이며 참여형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때문이다. 원자력 관련 논의는 정책 당국이나 관련 종사자, 언론만이 주도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합리적이며 과학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SNS의 전략적 활용은 필수적이다.

문명사회,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서로를 존중하며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도 이같은 원칙을 지켜낼 수 있기 바란다. ☺